

쌀 협상 동향과 쟁점

쌀 관세화유예협상의 결말시점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다. 최근 각 언론의 보도내용과 협상단의 비공식적인 대화내용들을 조합해보면, 관세화 유예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조건들을 최종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누차 주장했던 관세화유예가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선부른 평가이다. 단순히 관세화유예를 했다고 해서 쌀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관세화유예를 하게 되면 그만큼 상대국이 얻어가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지게 된다.

의무수입물량 증량, 민간수입허용, 소매판매 허용, 쌀 이외 품목 시장접근 요구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호에서는 최근 협상의 동향과 정부의 향후 행보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가 해야 할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협상 동향

10월말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

최근 협상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번 10월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달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제 최대 관심국인 미국, 중국과 6차 협상, 그리고 태국과 5차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물론 나머지 6개국과도 마지막 협상을 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협상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국가들과의 협상은 그다지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의 입장

상대국의 요구가 대체적으로 관세화보다는 유예로 모아지고 있으며, 유예에 대한 추가 양허수준이 초기 보다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

가 협상의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명확히 확인된 바는 아니다.

미국! 우리나라 쌀 관세화 전환에 부담 가져

미국은 2002년 대만과 쌀 협상에서 '매년 2%의무수입량 증대'를 요구했으나, 대만이 관세화로 전환함에 따라 쌀 시장을 중국에게 빼앗긴 경험에 있다. 또한 일본과는 수입쌀 중 미국쌀의 비율이 1995년 53%였으나, 일본이 1999년에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 2003년에는 18%로 줄어들었다. 반면 일본에서 중국쌀 점유율이 22%에서 79%로 높아졌다.

이러한 경험들을 비춰볼 때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가격경쟁력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세화유예를 선택해 안정적으로 자국쌀을 공급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 관세화 원하지만 미국과 보조 맞출 듯

협상 초기에 중국은 협상참가국 중 가장 높은 의무수입물량 비율(20%)을 늘리도록 요구했었다. 이는 우리에게 관세화로 전환하라는 일종의 압박용 이었다고 분석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세화로 전환하게 되면 대만과 일본에서의 경우처럼 상당한 이득이 있다. 중국의 쌀 생산구조는 생산비가 t당 80~90달러(1995~2000년)로 미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동북 3성을 중심으로 고품질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제 쌀 시장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냉해와 물 부족 등으로 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자포니카 쌀에 대한 자국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농현상으로 농산물 수입국가로

●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주요 쟁점

쟁점	UR방식	한국 정부	미국, 중국, 태국
의무수입물량 (MMA)	국내소비량(86~88년 기준)의 4%(초기 5년: 0.25%, 후기 5년: 0.5%씩 증가)	5~6%가능(추가 1~2%)	9%이상으로 확대 요구 (추가 5% 이상)
관세화 유예기간	10년	10년	-미국, 10년 수용의사 밝힘 -중국, 태국은 5년 유예 주장
국내 시판여부 MMA	MMA물량은 전량 가공용	국내 소비량의 1% 범위 내(국영무역)	-미국은 MMA결정 이후 논의 입장 -중국, 태국은 1~2%요구
수입관리방식	전량 국영무역 방식	동시매매입찰(SBS)허용 (단, 가공용)	SBS요구

* 1) 국내 소비량의 1%: 약 5만 톤(35만석)

2) 위 표의 수치는 한국경제신문(2004년 10월 11일)에 나온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전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자국 상황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관세화 유예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미국과 중국의 수준으로 요구할 듯

협상 초기부터 강력하게 관세화 개방을 주장해 왔으나, 협상에서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의 요구조건과 비슷한 수준에서 관세화 유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쌀 생산구조가 우리와는 다른 인디카 계열(장립종)이기 때문에 관세화 개방을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공용 이외의 수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유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향후 행보

내부협상은 형식에 그치나

정부는 협상내용과 대응전략, 최종 양허안의 수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0월 4일 열린 농림부 국정감사가 협상내용의 공개문제로 2차례나 정회되는 소동 끝에 비공개로 열린우리당 2명, 한나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의 의원들에게만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10월 말까지 대상국과 합의안을 만들고, 오는 11월 중순경에 농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협상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타결을 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상대국과 합의된 안이며, 국제적

인 협상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통해 혹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농민들이 협상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안을 수정하기보다는 119조 투융자사업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을 가지고 농민과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쌀 관세화 유예 협상도 과거 한·중 마늘협상과 올해 초에 있었던 한·칠레 FTA협상과 마찬가지로 농민과 국민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밀실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선대책 후협상' 원칙에 입각해 119조 투융자계획과 농업·농촌종합대책, 소득안정직불제를 바탕으로 개방에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고, 이는 선대책 후협상이라는 원칙을 지킨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농촌과 농업의 현실이 옹골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책들마저 매년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일관성이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게 고작이다.

이렇게 정부가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 방안

지난 9월 9일과 10일, 이틀간의 '350만 투쟁 선포대회'와, 11일에 있었던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식' 그리고 이달 5일에 있었던 '도단위 농민대회'는 바로 이러한 비민주적인 정부의 협상태

도와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방식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1월 19일에 있을 '350만 농민대회'를 사수해 △쌀 추가개방을 저지함과 동시에 정부의 일방적인 밀실험상의 태도를 규탄해 내는 일이다. 또한 그간 누차 주장해왔던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목표소득지지제도 도입 및 직접지불제도 확대 시행 △농협법 연내 개정 및 농림부 내 농협개혁위원회 설치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등의 요

구사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일이다.

특히, 이번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서 관세화보다는 유예 쪽으로 각 국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의무수입물량(MMA), 관세화 유예기간, 국내시판여부, MMA수입관리방식 등의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 '피해 최소화'라는 목표 보다는 '추가개방저지'라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목표를 확고히 하고 우리 쌀 농업을 지켜내도록 하자. 민농연



※ 지난호(9월 통권31호) 이어 관세화 유리 주장에 대한 의문점을 살펴보고 반론을 제기하고자 했던 '관세화 對 관세화 유예' 두 번째 이야기는 최근 협상이 극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쟁점이 변함에 따라 연재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